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주말 '분수령'

지난 7일 이후 광주·전남에서 42명 확진 주말 추이 지켜본 뒤 거리두기 격상 결정 방역당국 "집회 자제·예방수칙 준수" 호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일 이후 광주·전남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42명이 확진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역민에게 대규모 집회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에 따른 책임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42명(광주19명·전남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 이후 유흥업소 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0일 528명 확진자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동료 3명, 손님 3명까지 모두 7명(528-533, 535번)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의 접촉자뿐 아니라 동시공간 업소를 이용한 손님 등 124명 명단을 확보해 추가로 검사할 예정이다. 해당업소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협조하는 시민들의 개인 정보는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유흥업소발 지역 감염의 악몽을 떠올리며 유흥 업소 방역 수칙 이행 상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시설 폐쇄,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날 순천·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각각 3명씩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남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202번의 직장 동료로 같은 통근버스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202번 확진자의 직장 관련

자 375명과 회소에 거주하는 201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요양보호시설 14명, 기타 밀접접촉자 194명 등 총 58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전남 202번 확진자의 직장동료다.

지난 11일 오후 광양 3명(200·202·203번), 화순군 3명(전남 204·206번), 여수시에서 1명(전남 207번)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순군 확진자 3명은 전남 201번의 가족 2명(204·205번)과 직장동료 1명(206번)으로 206번은 201번은 화순군에 위치한 요양보호시설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 여수시 추가 확진자 1명은 순천 신한은행 연평동지점 직원인 광주 517번의 자녀다. 광양에서는 전남 200번에 이어 가족 2명(202·203번)도 진단검사에서 양성 나왔다.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격상했고, 광양시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동부권 지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관 8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T/F팀을 13일부터 운영한다.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사업장에 대해 ▲간부급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 시 업무배제 ▲출근·외출 복귀시 발열체크 의무화 ▲매일 증상 확인 등을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감염이 시·도 민간 일상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와 병상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지사는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다"며 "지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 3~19	흑산도	☀ 13~18
담양	☀ 3~19	구례	☀ 4~20
화순	☀ 3~19	곡성	☀ 2~19
영광	☀ 4~18	완도	☀ 8~19
함평	☀ 3~19	강진	☀ 4~20
무안	☀ 5~18	장흥	☀ 3~20
영암	☀ 2~19	해남	☀ 2~19
진도	☀ 7~17	고흥	☀ 5~20
신안	☀ 7~17	보성	☀ 2~19

일출 07:05 일몰 17:28
월출 04:19 월몰 16:21

목포	만조 12:32 ---	여수	만조 07:32 19:43
	간조 05:34 18:00		간조 01:06 13:3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131

'안전수능' 광주·전남 교육당국 긴장

2021학년도 수능을 20여 일 앞두고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 되고 있어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수능 전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장감 속 안전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일 하루 전날인 오는 다음달 2일까지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외부 개인 행사 자제, 시험장 안전 확보 등을 담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수능 직전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 격리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빛고

을 전남대학교병원을 특별시험장(병실 2개)으로 지정했다. 특별 시험장에서는 8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경우 3인 1조의 교사가 감독관으로 나선다. 자기격리 학생은 119가 해당 병원까지 이송한다.

전남교육청도 기관간과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수능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의 학교 전파를 감시하는 한편 수능 전 시험장 53개교에 대한 특별 방역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철 기자



헌책 다오, 새책 줄게

독서의 계절을 맞아 새마을문고광주북구지부(회장 오선영)회원들은 12일 오전 광주 문흥중앙초등학교 입구에서 신간 도서 등 1,500여권을 준비하고, 헌책 2권을 가져오면 새로운 책으로 교환해주는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을 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보성체육회장 갑질 의혹 경찰 수사

보성군 체육회장이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성군공무원노조는 "지역체육회장의 폭언과 보조금 유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9월 11일 체육회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를 요구하는 공무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속옷만 착용한 채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를 통해 2020년 체육회 보조금이 1,000여 만원이 잘못 집행됐고 개인차량 유류비, 접대비 명목 식대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발장의 사실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확보되면 수사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어머니 폭행·위협 40대 아들 검거

북부경찰서는 12일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A씨(4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20분께 북구 자택에서 만취해 60대 어머니의 팔을 비틀어 폭행하고, 욕설과 함께 라이터 불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라이터 불은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어머니를 위협하려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도 시급하다고 판단, 병원에 행정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강제노동 피해자 추가 소송 제기

근로정신대 모임 "미쓰비시, 자료 제출 응해야"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광주에서 열렸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민사 14부(이기리 부장판사) 심리로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렸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희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 재판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이 보유한 후생연금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으나 피고 측 대리인인 김용출 변호사는 문서 제출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즉시 상고를 했다. 문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에 대

한 판단은 광주고법에서 할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피해자들이 보관할 수 있는 서류는 징용통지서뿐인데 당시에 이를 보관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느라 보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원 관련 기록은 피고인 미쓰비시가 임의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피고는 구 미쓰비시와 달라서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허가

나고야 공장에 가서 관련자들을 만난 결과 과거 근로자들과 연관성이 있고 추모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민 기자

인터넷 검색 라임반찬 - **전국배송 런칭!!**

똑똑한 주부 똑똑하게 라임반찬

삼시세끼 고민, 5분이면 끝!
300여가지 레시피, 매일 100여개 반찬 조리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 www.limebanchan.com

봉선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3 ☎1588-6356 수완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00번길 49 ☎062-955-3167 첨단점 광주광역시 월계로 187 ☎062-971-3167